

# ● 제2회 정책경연의 장(2021년 3분기)

## ● 정책기획조정회의, 심사평가표 취합 (2021.09.13.~09.17.)

### 1. 정책제안서 심사 기준

- 심사기준(4가지)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후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
  - 의제 중요성, 의제 파급력, 정책대안 타당성, 정책대안 실현가능성
  - 정책기획조정회의 구성원 18명(각 위원장 및 연구원장, 사무총장) 중 과반수 이상 심사 참여
  - 단, 제출된 정책제안서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제안서의 경우 심사하지 않음
  
- 평가지표(괄호 숫자는 비중)
  - : 정책제안서 항목을 보고 각 평가지표에 대해 심사

구분	평가 지표	평가사항	정책제안서 항목
정책 의제 (60)	의제의 중요성 (30)	*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황분석을 잘 하고 있을 경우 높은 점수 - 문제의식이 명확한가? - 시의성 있는 의제인가? - 문제현황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?	배경
	의제의 파급력 (30)	*기존의 정책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제/정책대상을 다루고 있을 경우 높은 점수 - 정책내용 측면에서 참신한 의제인가? - 정책대상집단 측면에서 참신한가?	배경 기대효과
정책 대안 (40)	정책대안의 타당성 (30)	*정책 개선방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적절한 정책수단 제시했을 경우 높은 점수 - 개선해야 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? -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?	주요 정책내용 기대효과
	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(10)	*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높은 점수 -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?	개선방안

## 2. 평가 결과

- 제6차 정책기획조정회의(10명 참석, 6명 위임) 결과 : 최종 투표에서 1~3위 정책 국회 발의 예정, 정책기획조정회의 자체 평가표는 별도 제출
- 평가표 취합 결과

No.	위원회	정책명	평가 (○/△/×)
1	장애인위원회	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제도	
	코멘트 : - (법안 보완/발전 위해)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자료 요구 예정. 사문화 우려 차원에서 참고. - 서로 동등한 인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. - 장애인복지기관의 실태 반영 필요. - 법정 의무기관 기관장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함. - 의무 교육 방법을 온라인 교육 및 인증을 통해 제3의 기관의 수익 활동 창출 및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좋을 것.		
2	장애인위원회	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	
	코멘트 : - 장애인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용량의 확대가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 됨. 장애인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 차량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고 지원할 필요를 느낌. - 배기량 기준이 아닌 친환경차량과 연계하여 법 적용하면 좋을 것. - 산업환경(전기차 등)등의 변화 고려 필요. - (법안 보완/발전 위해) 친환경차 추가 가능한지 검토 예정. - 친환경 전기, 수소자동차 포함하도록 수정 필요함. -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차량 배기량의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.		
3	교육위원회	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	
	코멘트 : - 지방분권 법안 및 지방산업 육성 등의 법안과의 조율 필요.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선행이 필요함. - 국립대를 서울대화 해서 어디든 전공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. - 한계대학을 어디까지 규정할지가 의문이긴 하나, 지방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에 공감.		

	<p>- 이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진행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학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피교육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.</p>	
	소상공인위원회	복원기획자와 독립기술인에 대한 지원
4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원의 재사용과 지역순환경제 측면에서 좋은 주제로, 생활권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자 ‘마을기술자’ 개념과 이어질 것. 이분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.</li> <li>- 다양한 복원기획자 및 독립기술인의 개별적 지원보다는 특성화 거리 조성 등 문화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 있음.</li> <li>- 재활용인력보다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기업 지원방안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함.</li> <li>- 장인 등의 표현 고려 요망, 소상공인지원법안 등 희망.</li> <li>- 다소 좁은 타깃 대상이긴 하지만 산업적으로, 환경적으로, 문화적으로 진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됨.</li> <li>-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.</li> </ul>	
	사회복지위원회	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(경도인지장애판정자) 서비스 제공 방안
5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건보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재활 서비스 확대 방안이 필요함. 지자체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, 처방약은 건보에서 서비스는 복지부에서 하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두는 방안 검토 필요함.</li> <li>- 치매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 되고 개인의 삶의 안정적 유지 기간을 늘려줌으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</li> <li>- 다양한 요양병원(재활, 암, 노인)등이 있어서 치매 관련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음.</li> <li>- 치매와 관련한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.</li> <li>- 전국민 주치의 검토 필요.</li> </ul>	